

일본은행, 성장분야 지원확대 발표

일본은행은 디플레 탈출을 위해 성장분야에 투자하는 민간금융기관의 대출규모 확대와 연장을 결정.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전략의 조기 효과를 기대하면서 디플레를 극복하려는 전략

□ 일본은행에 의한 성장분야 지원

- 일본은행은 13일,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 규모를 현재 3조5,000억엔에서 2조엔 증액된 총5조5,000억엔으로 확대
 - 성장 동력 산업인 △환경, △에너지, △의료 등 18개 성장분야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늘려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

〈일본은행이 선정한 18개 성장 분야〉

1. 연구개발	10. 고령자사업
2. 起業	11. 콘텐츠사업
3. 사업재편	12. 관광사업
4. 아시아지역의 투자 및 사업전개	13. 지역재생 및 도시재생사업
5. 대학, 연구기관의 과학·기술연구	14. 농림수산사업, 농상공연계사업
6. 사회 인프라정비·고도화	15. 주택지원사업
7. 환경·에너지사업	16. 방재대책사업
8. 자원 확보·개발사업	17. 고용지원 및 인재육성사업
9. 의료, 간병, 건강관련사업	18. 보육·육아사업

* 성장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18개분야 외에도 예외로 인정

- 일본은행은 개별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, 용자대상 기업선정은 금융기관이 담당

- 일본은행이 주도하여 민간금융기관의 성장분야에 대한 용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
- *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“디플레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” 라고 언급하면서, 금융 완화와 성장 산업에 집중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
- *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는 성장 분야의 용자 확대를 통해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 시키고자 하는 자금공급메커니즘으로 연 0.1% 저리 용자로 환경·에너지·의료 분야의 대출 규모를 3조엔에서 3.5조엔으로 증액한 것이 특징
- * 외상매출이나 재고를 담보로 용자해 주는 부동산·채권담보대출(ABL)한도는 5000억엔 규모로 2년간 연장 조치

〈일본은행의 성장·부흥지원 용자제도〉

구 분	성장분야지원 대출제도		중소기업 지원	달러 대출 지원
	성장분야 대출	ABL대출		
도입 시기	‘10년 6월	‘11년 6월	‘12년 3월	‘12년 3월
대출 규모	3조엔⇨3.5조엔	5천억엔	5천억엔	1조엔 상당 달러
대출 금액	1000만엔 이상	100만엔 이상	100~1000만엔	미정
대출 기간	최장 4년	최장 4년	최장 4년	최장 4년
적용 금리	연 0.1%	연 0.1%	연 0.1%	시장 금리
‘12년3월 현재 대출 총액	2조9,998억엔	891억엔	-	-

(자료) 일본은행

□ 일본금융기관의 지원 사례

- ‘10년 6월, 일본은행이 발표한 ‘성장분야 자금지원정책’ 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성장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용자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

- 도쿄미쓰비시UFJ은행은 「성장기반강화 용자프로그램」 과 「BTMU 성장전략서포트」 등을 설정하였으며, 미쓰이스미토모은행도 환경, 에너지분야의 중국시장을 겨냥한 펀드 설정 등 용자제도가 확대
- * 지방은행들도 LED사업, 자동차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용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
- 일본은행은 과거 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게 용자를 실시하였는데 용자총액은 2조9998억엔으로 집계
- 제1차로 4,625억엔(45은행), 제2차로 9983억엔(106은행), 제3차로 7,221억엔(122은행)을 용자하는 등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됨
- * 일본은행의 성장산업의 지원 효과에 대해, TDB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0%가 「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」 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
- * 일부 기업은 “역시 담보나 실적이 없으면 용자가 어렵다”, “ 민간은행은 담보만 챙기지, 기술력이나 미래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 성장분야의 용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” 는 등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

□ 시사점

-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은행의 성장산업 용자확대 결정으로 ‘디플레’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은 성공하였으나, 일본정부의 재생전략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
- * 일본정부는 ‘11년 12월, “일본재생 기본전략” 을 발표하였으나, ’ 20년도까지 3%의 명목성장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
- 일본은행은 환경·에너지, 인프라 분야의 용자실적이 많아, 일본

은행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우리기업들이 해외 인프라프로젝트를
수주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분야에서의 양국
간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

- * 특히,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여유 자금이 풍부하여 일본정부도 지방은행의 여유자금
활용방안을 찾고 있으므로, 우리정부나 국책은행의 보증제도 등 자금을 활용할
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3.14). 「日銀政策決定会合 成長支援へ苦心の一手」

日本銀行(2012.3.14). 「当面の金融政策運営および成長基盤強化支援の拡充について」